

#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26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5. 6. 10.
- 라. 회부일자 : 2015. 6. 17.

### 2. 개정이유

- 공립 각급 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사후동의(추인)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 3. 주요내용(사업개요)

- 추진방식 : 협동조합 및 전기발전사업자 형태로 실시
- 시설형태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시설
- 건물현황 및 시행자

순	학교명	건물명	건축연도	건물등급	옥상면적	시행자
1	상원초	본관동	1989	B	1,246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	삼각산고	교사동	2011	A	1,652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	창도초	본관동	1982	B	1,000	(주)나눔발전소
4	신명초	본관동	1993	B	1,444	(주)나눔발전소
5	대명초	교사동	1986	B	1,346	(주)나눔발전소
6	묘곡초	본관동	1985	B	2,578	(주)나눔발전소
7	성내중	본관동	1985	B	1,100	(주)나눔발전소
8	시흥중	본관동후관동	1993	B	1,724	(주)이맥스시스템
9	영남초	교사동	1991	B	1,625	(주)이맥스시스템
10	탑동초	본관동	2003	A	1,167	탑동햇빛발전소
11	배봉초	본관동 신관동	1971 2011	B A	846 1,070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12	수서중	본관동	1992	B	2,053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13	문현중	본관동	2009	A	3,09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14	정진학교	중등동	1988	B	1,661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 ○ 사업내역

학교명	설치형태	설치면적 (㎡)	발전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건설비 (천원)	설치기간
상원초	협동조합	440	37.20	43,450	85,000	'13.11~'14.4
삼각산고	"	113	19.00	21,623	47,000	'13.3~'13.6
창도초	전기발전사업자	565	99.75	116,000	286,000	'13.9~'13.10
신명초	"	492	76.00	88,768	198,000	'13.12~'14.3
대명초	전기발전사업자	575	99.75	116,000	284,350	'13.12~'14.3
묘곡초	"	565	99.75	116,000	240,000	'13.12~'14.3
성내중	"	565	99.75	116,000	240,000	'13.12~'14.3
시흥중	"	650	100.00	127,750	300,000	'14.2~'14.3
영남초	"	665	79.80	93,206	240,000	'15.2~'15.5
탑동초	"	480	82.35	100,207	200,000	'15.2~'15.2
배봉초	서울시 시범학교	420	74.2	86,666	172,524	'14.7~'14.12
수서중	"	420	74.2	86,666	172,034	'14.7~'14.12
문현중	"	360	51.675	60,356	135,069	'14.7~'14.12
정진학교	"	390	65	75,920	160,000	'15.7~'15.9

○ 사용·허가조건

학교명	허가일	연간사용료(천원)			사용허가기간
		2013	2014	2015	
상원초	2013.11. 1.	1,300	1,300		`13.12. 1.~`23.11.30.
삼각산고	2013. 3.12.	1,527	763	773	`13. 6. 1.~`23. 5.31.
창도초	2013. 7.11.	394	2,179	2,500	`13.10.25.~`23.10.24.
신명초	2013.11. 6.	104	2,291	2,264	`13.11. 6.~`23.11. 5.
대명초	2013.11. 6.	124	3,522	3,604	`13.11. 6.~`23.11. 5.
묘곡초	2013.12.21.	167	3,402	3,547	`13.12.21.~`23.12.20.
성내중	2013.11. 6.	186	2,774	2,810	`13.12.14.~`23.12.13.
시흥중	2013.11.19.		6,327	6,135	`14. 2.19.~`24. 2.18.
영남초	2014.10. 2.			6,805	`15. 2.23.~`25. 2.22.
탑동초	2014. 7.22.			5,155	`15. 2.12.~`25. 2.11.
배봉초	2014. 6.16.		4,452		`14.10.22.~`24.10.21.
수서중	2014. 6.16.		4,452		`14.10.22.~`24.10.21.
문현중	2014. 6.16.		3,101		`14.10.22.~`24.10.21.
정진학교	2015. 2.26.			3,900	`15. 7.15.~`25. 7.14.

- 사업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단, 사업기간 내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 영구시설물 즉시 철거 및 시설물철거비용 예치 조건(사업종료시 계속 사용이 철거보다 교육 및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철거비용의 예치 없이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음)
- 햇빛발전소 설치, 안전진단 ·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 시설에 대한 대물·대인 등 보험가입
- 시설물 설치 건물 옥상 누수시 보수 조건
- 건물구조검토, 설계, 건설, 학생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 전액 부담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 5.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동의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526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서울상원초등학교를 비롯한 14개 학교 옥상에 기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 나. 주요 검토의견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립학교의 유휴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sup>1)</sup> 축조하게 할

---

1)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 중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 없이는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그 철거 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5-0051), 태양광 발전시설은 관련 규정에서 모듈지지대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sup>2)</sup>.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상원초등학교를 비롯한 14개 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의 유휴공간을 민간에게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동안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립학교의 유휴공간을 민간에게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추진한 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금번 동의안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15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사후적으로 의회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의회의 사후추인을 통해 그간의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sup>3)</sup>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는 향후 공립학교의 유휴공간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의회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sup>4)</sup>

**□ 이상으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고정(지지대와 연결부, 기초지지대의 용접 및 볼트·너트 조임) 및 접지공사를 하여 지중화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국민신문고 안전행정부<2013.7.3> 및 산업통상자원부 답변<2013.7.9>).

2) 이러한 동의 절차는 2010년 4월 1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으로 규정되었음.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할 수 있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번 제261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절차를 명문화하였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

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3.1.]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times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div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절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14.4.22.] [법률 제12296호, 2014.1.21., 일부개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